

북도발 이어지는데...광주 전쟁대피소 유명무실

대피소 582곳 관리 허술...시민들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일부 문 잠겨 있어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없어 긴급대피 활용 불가능...실효성 떨어져 3만 여명 수용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대피소는 안내 표지판조차 없어

전사·사병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광주지역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피소는 문이 잠겨 있고, 대피소 안에는 라디오·음극세트 등 비상용품 등이 아예 없어 긴급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8월 광주시가 '2022 울지연습'에 앞서 자치구와 함께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580여곳의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점검했지만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조차 없는 곳도 있어 점검조차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와 안전재단포탈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민방위 긴급대피 시설로는 광주지역에 총 582곳(남구 126곳, 동구 88곳, 서구 101곳, 북구 145곳, 광산구 122곳)이 지정·운영중이다.

지난 5일 북한이 동·서해상의 해상왕궁구역에 포탄 사격을 가하는 등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지만, 막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민들은 대피소가 어디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약 3만여명을 수용하는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대피소는 대피소라고 알려주는 스티커나 안내 표지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도 민방위 업무지침(업무지침)에 따르면 대피시설 출입구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표지판은 노후·훼손으로 식별이 어렵

지 않게 정비해 해야하고 교체시에는 다국어(을 병기하도록 돼있다.

또 유도 표지판은 대피방향이 실제 대피방향과 일치하도록 좌·우를 구분해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대피소 입구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문제는 대피소를 들어가기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 대피소는 운암동 인근 주민들을 제한 없이 수용해야 함에도 아파트 주민들만 엘리베이터와 아파트 내 계단을 통해 들어가갈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외부인은 아파트 입구부터 제재당했다.

또 대피소임에도 실질적으로 민방위 훈련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상황에서 대피소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대피소인지도 몰랐고 1년 넘도록 근무 했지만 주차장을 활용해 민방위 훈련을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남구민방위교육장은 500여 명을 수용하는 대피소이지만 지난달 22일 방문 시 안쪽에 문이 굳게 잠겨 열리지 않았다.

업무 지침에 따라 평시에도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고, 즉시 활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물건 적재 및 시설에 고정장치 부속이 금지돼 있지만 내부에서 문을 걸어 잠금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6일 재차 방문했을 때 교육장은 리모델링 공사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에는 당장 사용가능한 민방위 대피



전쟁이 발발하면 광주시민들이 대피해야 할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 민방위교육장'이 안쪽에서부터 문이 굳게 잠겨 열리지 않았다.

시설로 표기돼 있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한 대피소 홍보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급남로 지하상가(3만559㎡)는 3만7000여명이 대피하는 공간이지만 지하상가 방문객은 컸던 상인들조차 대피소라는 사실을 몰랐다.

필수 비치 비상용품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피소마다 휴대용 도가·삽·스패너, 망치 등 정비공구, 자가발전 손전등, 라디오, 양초, 상남, 호각 등 비상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하고 정전시 4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비상조명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대피 가능 인원 1인당 1개의 주민 대피용 방독면, 응급처치비

품 등도 구비돼 있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지자체는 분기마다 주민대피시설을 찾아 일제 점검·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대피방해 요소를 없애는 한편 대피시설 정보를 갱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현황을 파악해야 하지만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교회 같은 공공시설의 경우 관리 주체가 지자체가 아니고 협조를 얻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민천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최태원 부부 34년만에 이혼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광 부부가 34년여의 결혼생활을 끝마치게 됐다. 1조원의 재산분할에 대한 결과도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판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판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지연이자 발생한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자료의 이자까지 포함해 최 회장이 노 판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은 지난 1988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딸 노소영씨와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지만, 노 판장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고는 입장이었다.

결국 이혼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2019년 12월 이혼에 반대하던 노 판장은 입장을 바꾸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주식 SK(주) 주식(17.5% 1297만여주)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최 회장은 재판에서 부친인 고(故) 최정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주)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노 판장은 결혼 기간과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 10대 금은방 절도’ 공범 2명 자수

‘광주 10대 금은방 절도 사건’〈광주일보 12월 5일자 6면〉을 공모한 공범 A·B(19)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동부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 3명과 짜고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금은방에서 4000여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경찰에 붙잡힌 10대 3명이 훔쳐 온 귀금속을 전달받는 역할을 맡았으며, 친구 B씨는 그 장물을 팔아주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B씨가 10대 3명에게 절도 범행을 교사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범죄 수익을 5명 이서 20%씩 나눠갔기로 했다는 진술이 나와 교사범이 아닌 공범으로 결론지었다. A씨는 오토바이 수리비와 지인·친구 등에게 빌린 수십만원 수준의 채무를 변제할 돈을 구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고교 중퇴자 C(16)군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줬는데, C군이 교통사고를 내자 수리비 150여만원을 요구했다. C군이 수리비를 낼 여력이 없음을 알았던 A씨는 C군에게 ‘금은방 털이도 수리비를 메우고, 채무도 털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군이 배달대행 일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중학생 등 2명을 추가 포섭하면서 5인조가 모였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이들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영상을 통해 금은방 진입 방법, 대형 방탄유리 부수는 법 등을 익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B씨에게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주범 C군은 구속 수사 중이며 범행에 가담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조사 후 보호자에 인계됐다.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에 송치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iyou@kwangju.co.kr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접대비 유용 의혹 내사

경찰이 전남대 산학협력단 출자 기술지주회사의 유용비 유용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는 등 관련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내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출자·소유한 기술지주회사의 지출 내역 중 유용업소에서 결제한 내역이 다수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첩보를 바탕으로 내사에 들어갔고, 전남대의 자체 감사 결과가 나오는데도 수사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대는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여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울)이 국정감사에서 기술지주회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유용업소 추정 상호에서 73건(총 5000만원 상당)의 결제가 이뤄졌다는 지적을 해 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해당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 자료를 요청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해 수사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찰 내부망에 이태원 참사 수사 비판 목소리

전남경찰직장협 부위원장 “꼬리자르기식 안돼” 글 올려

경찰 내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강오 전남경찰직장협의회 부위원장은 6일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경찰 대학신 TF팀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서 부위원장은 글을 통해 “이미 2014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주최자 여부와 관계없이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었지만 이태원 참사 당시 이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면서 “경찰청은 기존 매뉴얼이 있는데도 실행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당시 10만명 이상이 운집할 것을 예상했고,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기동대 지원이 되어야 한다’며 행사의 위험성을 인지했으면서도 경찰 통제선 설치도 기동대 배치도 하지 않았다. 또 지하실 무장자 통과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지금 이태원 참사 수사방향은 용산사 정보과장 등 경찰서 직원들과 이태원 파출소 팀장 등만 처벌하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만 보이고 있

‘집단·상습’ 관세범 최대 징역 19년 6개월

대법원 양형 기준 마련

집단·상습적으로 관세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면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5일 제 121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관세범죄의 유형 4가지는 ▲관세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수품 취득 등이다. 집단·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4가지 유형 모두 동일하게 권고형량은 징역 9~13년이다.

하지만 특별 가중 인자만 2개가 있거나 특별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형량의 상한을 2분의 1 가중해 최대 19년 6개월의 징역영역에

하도록 했다. 특별 가중인자는 조직적·전문적·지능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관세사를 교사하거나 세관공무원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 무신고 수입·수출의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이다.

양형위는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의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개인정보 침해 범죄 중 개인정보 부정 취득 후 제공, 신용정보 누설, 통신비밀 침해 등은 가중인자가 있을 때 징역 2~5년에 처한다.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가중 인자가 있을 때 징역 6개월~1년 4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은 공경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제 123차 양형위원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켜보아야겠지만 이태원 수사 자체가 ‘꼬리자르기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눈속임 또는 다른 방향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매뉴얼이 있는데도 실행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에 근거해 책임질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참사의 본질을 비켜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글이 게시된 이후 달린 댓글도 서 부위원장의 내용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해남에서 교통사고 수습하다 뒷차에 치여 70대 운전자 사망

해남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70대 운전자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해남군 현산면 편도 2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A(71)씨가 B(74)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앞서 이곳에서는 A씨가 몰던 5t 트럭과 C(58)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해남소방이 도착해 구조 작업을 벌이는 동안 A씨는 중앙선 인근에서 서 있었는데, 뒤따르던 B씨가 A씨를 보지 못하고 차로 충격했다.

A씨는 병원에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와 C씨는 각각 가슴통증, 다리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중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흥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QR코드를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71821	1	영광군 영광읍 대하길3길5-19, 5층 501호 73.1㎡	다세대	121,000,000 121,000,000	
2022타경 5886	1	광산구 수원동 670-1 904㎡	답	1,771,840,000 1,771,840,000	류경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요
2022타경 6278	1	영광군 영광읍 맥리리 249-3 692㎡	대	408,280,000 408,280,000	매각채외연계이더 1등소재
2022타경 70675	1	동구 월남동 114-2 799.7㎡ [정재학651/750 지분전부, 수목포함매각, 명지, 분묘소재미상]	전	332,863,890 332,863,89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제한
2022타경 71593	1	북구 월출동 산 18-41 629㎡ [현황일부축전, 경계선상분묘 [평경] 소재하나인접지외경계 불명하여정확한경계측량요]	임야	32,079,000 32,079,000	명지, 수목포함매각

● 고교원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해야 하는 최고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 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명확한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지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의 예외 우선매수신고권 현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전매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개자 우선 매수신고원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2. 12. 21.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2. 12. 28.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친된 기일당첨표 서간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액,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남긴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배 [1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행한 자기인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약금의 제공한 서신 [일명 보증을]을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매수신고인과 자문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장차 증명되는 즉시 반납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 ② 차질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단, 재매각일ום 지정된 날의 3일만까지 중매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범용을 납부하면 대금지급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당권, 가압류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기록을 위해서는 통폐색외 지방공공채를 납부한 후 통폐색외수필확인서 및 통폐색외수필증거서를 첨부하고, 국민수택청합발령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추속하여 줍니다.
- ② 매각대금을 납부할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점유자, 소유자 또는 해당채권자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 ① 매각허가 또는 낙찰기일 또는 최후의 낙찰가액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매수신청인들은 매각허가 후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사업 자락특성상 및 낙찰자원이 있을 때에는 그 낙찰보증금의 반환에 동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② 신청된 공고되는 물건의 최종의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인들은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일ום 열람,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충(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음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③ 특별매각조건과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④ 입찰보증금 미납 시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동의하셨으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단원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항은 입찰명령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소유권 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매수신고인으로서 결정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충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도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 ⑥ 공고된 물건등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허가되지 않거나 정행이 취소·경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⑦ 신청된 공고되는 물건의 최종의 매각기일에 당일에는 매각이없고,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문공고등을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수)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매각기일 공고의 유효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공매공고 - 매각고고 섹션]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의 열람 가능은 재판부 제공목적과 관련하여 지 아니하는 것을 국민명령을 위하여 따로 제한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매각물건이 신청이나 광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손해 배상의 청구 및 수급권, 상속인 등의 신청은 물론에 관하여 반드시 법원에 내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7.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종희